與 "전문성 고려한 인사" 野 "MB만을 위한 개각"

'12·31 개각' 새해부터 인사청문회 격돌 전망

'12·31 개각'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엇갈리면서 이달 중순께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새해 정국 주도권을 놓고 일전을 벌일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청문회는 작년 말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2월 국회로 이어지는 길목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전이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개각 직후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한 개각이 아니라 측근을 위한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라고 평가한다"며 "특히 민간인 사찰의혹 관련 인사나 실패한 경제정책 관계자, 국민 지탄을 받아 물러난 사람들이 중용된 것은 국민을 무시한, 오직 이명박 대통령을 위한 개각이라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해당 부서의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혹독한 '현미경 검증'을 통해 대여 공세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각오다. 민주당은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 등 청문회대상자 3명에 대해 병역면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등 공직부적격 '4대 과목'을 철저히 따져 지난해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 사태를 재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본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정 감사원장 내정자를 정조준해 민간인 사찰 파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사장 연임로비 의혹을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는 '김태호 낙마'의 주역인 법사위 소속 박영선 의원과 법사위원장 출신인 유선호 의원, 전병헌 정책위의장, 행정 경험이 풍부한 조영택 원내대변인 등 전투력이 뛰어난 '저격수' 의원이 거론된다.

이와 관련,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2일 "내정된 감사원장의 경우 BBK, 민간인 사찰관련해서 의혹이 있는 분"이라며 "특히 청와대 수석 출신의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경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경제수석 당시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물기로 했으며 정병국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는 10개월밖에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따지는 한편 종편 선정과정에서 역할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상생의 정치를 외면하며 연초부터 흠집내기식 정치공세에 나설 경우 이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나라당도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하겠지만, 민주당이 새해부터 청문회 정치공방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의원들로 감사원장 청문특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으며, 금주 중 정부의 인사청문 요청서가 넘어오는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퍼주기 선정 '미디어 빅뱅' 예고

종편 4곳·보도 채널 1곳 무더기 허가

광고시장 불투명 출혈경쟁 불가피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이 서울시 종로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랍 31일 종합편성(종편)·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채널들의 출현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고착화된 미디어 산업 지형에 새 바람이 불 전망이다.

최시중 위원장이 "종편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 지상파의 디지털전환이 이뤄지는 2013년까지는 미디어 빅뱅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강조한 것처럼 종편을 미디어 산업 지형을 뒤바꿀 수 있는 기폭제로 삼겠다는 의도가 내포돼 있다.

◇종편 성공 넘어야할 산 많아 = 하지만 종편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점을 넘은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4개 사업자나 선정됨에 따라 종편의 성공 및 시장 조기 안착에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우선 광고시장이 정부의 기대수준으로 커질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전체 GDP의 0.68%인 광고시장을 2014년 GDP의 1%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금액으로는 같은 기간 7조5000억원에서 13조8000억원으로 광고시장을 불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광고주들인 대기업들은 광고를 단기간에 늘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난색이다. 방통위가 광고판매를 대행하는 미디어렙 법안도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것도 변수다.

경우에 따라서 종편들이 각개 전투로 광고영업 전선에 나서게 되면 수주를 놓고 혼탁한 과열 경쟁도 우려된다는 것이 광고주들의 견해다.

종편과 지상파, 케이블TV 등 매체들이 본격적인 시청률 경쟁을 벌이다보면 가뜩이나 유료방송 채널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선정적 자극적인 프로그램의 범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미디어 M&A 활성화=이러한 당면한 과제를 볼 때 당장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시장의 파이를 키운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미디어가 태동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무엇보다도 지상파 방송사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콘텐츠 수급에 물꼬가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화될 태블릿 PC, 스마트TV 등 스마트 미디어 등장으로 콘텐츠 수요가 더욱 늘어나면서 종편이 미디어 산업의 혈관인 콘텐츠 공급측면에서 중요한 한 축을 맡을 것이라는 견해다.

종편과 보도채널이 등장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 환경이 개선되고 이를 토대로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다양한 매체간 협력과 경쟁이 벌어지면서 사업자간 인수합병(M&A)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12·31 개각 장·차관급·특보 내정자 프로필

정동기 감사원장 기획·정책판단 탁월…보호관찰제도 정착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탁월한 기획력과 정책판단 능력을 갖췄으며 치밀한 업무 처리와 실천력이 돋보인다는 평. 2004년 대구지검장 시절 기업경영 혁신기법인 '6시그마' 운동을 검찰에 최초로 도입했고,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를 정착시킨 주인공으로 인정받는다. ▲서울(57·사시18회) ▲한양대 법대 ▲인천지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 ▲대통령 민정수석

정병국 문광부 MB 미디어 정책 입안 '문화·미디어 전문가'

11년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를 지켜온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미디어 전문가'.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 정책 입안에 깊이 관여, 지난해 미디어관계법 국회 통과에 견인차 역할을 했다. ▲경기 양평(52) ▲성균관대 사회학과 ▲16~18대 의원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21세기 미디어발전특별위원장, 사무총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최중경 지경부 정통 재무관료 출신 자타공인 금융 전문가

금융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재무관료. 현 정권의 국정기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대학 졸업 후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에서 일하다 행정고시 22회로 관가에 입문했다. 과감한 외환시장 개입을 놓고 '최틀러'라는 별명도 회자된다. ▲경기 화성(54) ▲서울대 경영학과 ▲재경부 금융정책과장 ▲국제금융국장 ▲기획재정부 1차관 ▲청와대 경제수석

김동수 공정위장 물가 관리 요직 거쳐…소비자 기본법 토대

주로 물가 관리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경제관료이다. 물가 부문을 담당하면서 제조물책임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의 토대를 닦았다. 인화를 중시하며 정책 조정에 뛰어나다는 평. ▲충남 서천(55) ▲고려대 경영학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2심의관(2급) ▲기획재정부 차관보 ▲기획재정부 제1차관 ▲수출입은행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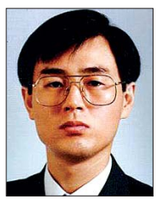
김석동 금융위장 관료시절 별명 '대책반장' 현안마다 앞장

금융정책 분야의 요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 관료 시절 별명이 '대책반장'일 정도로 큰 현안이 터질 때마다 전면에서 진두지휘할 만큼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외환은행 매각과 LG카드 처리 등을 주도했다. ▲부산(57) ▲서울대 경영학과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국장 ▲금감위 부위원장 ▲재정경제부 1차관 ▲농협경제연구소 대표

김영란 권익위장 대법관때 진보적 판결 많아 법조계 신망

차분하고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재판 능력으로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텁다. 2004년~10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형제와 호주제에 반대했다. ▲부산(54) ▲서울법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정채찬 공정위부위원장



공정거래 분야에서 외길을 걸어온 공무원으로, 소비자 보호와 기업 담합 등에 뛰어난 식견으로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경북 문경(55) ▲고려대 경영학과 ▲공동행위과장 ▲기획관리관 ▲카르텔조사단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공정위 상임위원

김대식 권익위부위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17대 대선에 출마하자 '선진국민연대'를 결성, 전국을 돌며 지지세력을 끌어 모은 'MB맨'. 6·2지방선거에서 전남지사 후보로 나서 13.39%의 득표율을 올렸다. ▲영광(48) ▲동의대 ▲동서대 일본어학과 교수 ▲민주평통 사무처장

박형준 사회특보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으로 여권 내 대표적인 전략 이론가.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사람'으로 부상했다. ▲부산(51) ▲고려대 ▲중앙일보 기자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 대변인 ▲청와대 홍보기획관

이동관 언론특보

정통 언론인 출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캠프에 뒤늦게 공보특보로 합류했으나 현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서울(53) ▲서울대 정치학과 ▲동아일보 정치부장·논설위원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 비서관